

# 1차 주택공급대책서 그린벨트 빠질까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서 신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밝혔다. 신규 주택 후보지로 예상되는 경기도 과천 그린벨트 지역.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없이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목표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21일 발표될 후보지에서 그린벨트가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국토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직권 해제'인데 자치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심교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린벨트를 안 풀 것"이라며 "국토부가 해제를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도

크고 여론도 안 좋아 쉽지 않다" 1차 발표에서는 그린벨트지역이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대책 협의에서 도심 유희지 활용과 상업지역 주거비용 상향,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2022년까지 6만2000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본지 9월18일자 [단독]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없이 신규주택 6만2000호 공급안 제시 참조)

이는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공급하게 될 30만채중 국토부가 서울시에 요구한 5만채를 넘어서는 것으

###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없이 6.2만호 공급안 제시

### 국토부, 직권해제 가능하지만 역풍 우려에 부담

### 해제강행 정치적 부담도 크고 여론도 비우호적

로 정부 목표치를 넘어선 수치다.

지금 상황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대안을 국토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지만 받아들여진, 받아들여지지 않던간에 이틀후 발표되는 1차 후보지에는 서울시와 합의를 그린벨트지역이 포함되지만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처음 나왔을때부터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반면 국토부는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도심내 유희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겠다고 서울시의 입장 선화를 간접적으로 압박해왔다.

물론 공공주택건설이란 명분으로 시도지사에 위임된 30만㎡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국토부가 직접

행사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같은 정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대척점에 서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일 뿐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고민은 커지고 있다.

한편 17일 청와대 회의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간 공식 회의는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난 것'을 1단계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감안해 1차 대상지에서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제외하고 2차, 3차에서 발표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1일 공급대책을 발표하는데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전국시도의회 동시 공동 입장 발표

일시: 2018. 9. 19(수) 오전 10시 | 서울특별시의회 기자회견실



김경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TF 단장과 더불어민주당 고병국(왼쪽) 의원, 정의당 권수정(오른쪽) 의원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전국시도의회 동시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전국시·도의회의장 “자치분권 종합계획 깊은 유감… 전면수정”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19일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내용에 반발하며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태스크포스 김경태 단장 등 시의원 3명이 발표자로 나섰다.

협의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중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을 저해하는 부분을 전면 수정하라며 "대통령 임기 말이 돼서야 시행하겠다는 느슨한 형태의 계획을 제시하기 보다는 행정안전부는 부처 직권으로 가능한 대통령령과 부령부터 우선 개정에 정부의 지방자치 제도개선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회에 "인사권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확충 등을 위해 발의돼있는 12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27년 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지방자치의 숙원과제들을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관련 항목은 전면 후퇴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엔 한 치의 변화도 없다"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속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등에 대해 "주민자치회의 설치·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주민자치회를 주변화시켜 전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재정분권 부분에 관해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 본질적 기제인 재원보전관련 구체적 계획이 누락됐다"며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 후 약 1년이 경과했음에도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손에 잡히는 실행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자치분권 내용에 관해선 "조례제정의 범위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환영할 만하지만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실질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며 "따라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같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조례제정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인사권 독립 부분에 관해서도 "인사권 독립방안을 미련하게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있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빠져 있다"며 "자치조직권은 시행령과 부령 개정만으로도 상당한 업무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개혁의 법 개정 정을 핑계로 개혁의 시간표를 지연시키지 말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지방의회 핵심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추진의지를 보면 태만이 고장 난 자치분권 시계를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김 단장은 "정부는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정부는 계속해서 묵살해 왔다. 이제 전국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우리의 하나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며 "앞으로 지방의회의 민행 역할을 했던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2022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 절반으로 줄인다

### 5대 분야 38개 세부과제...재활용 70% 달성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종합계획을 마련해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에 도전한다고 19일 밝혔다. 2022년까지 서울시내 전체 사용량의 50% 감축, 재활용률 70% 달성이 목표다.

시는 5대 분야 38개 과제로 구성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시와 자치구, 시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우산·비닐케퍼 대신 빗물 제거기 사용 ▲업무공간에서 1회용 컵 사용 금지 ▲공공매점 등에서 비닐봉투 금지 등 정책이 내년부터는 시·자치구 사무 민간위탁 기관까지, 2020년 이후에는 시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는 민간사업장까지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시민과 직원의 1회용 컵 시정 내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시는 한강시민공원, 공원, 시립체육시설 내 입점 매장, 음식점, 푸드트러 등과 신규 계약 시 사용

수익허가 조건에 1회용품 사용여부를 포함시킨다.

고척돔·잠실야구장에선 1회용 비닐용원탁대 대체품을 내년까지 개발한다. 한강시민공원 주변 배달음식점은 플라스틱 용기를 종이 용기로 대체한다. 경기장 대관 시 분리수거를 의무화한다.

발도개비 야시장 푸드트럭에선 친환경 용기 사용 개선을 유도한다. 행사장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형 이동식 음수대를 설치한다. 모든 장터·행사장에선 육류, 생선, 야채 등 물기 있는 제품을 담은 용도로만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것기로부터 식기까지 대표적인 1회용품 과소비치인 '정제식장' 재활용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시립병원 보라매·서울의료원 2곳을 '1회용품 안 쓰는 정제식장'으로 시범 운영한다. 비닐식탁보를 종이식탁보로 대체하고 다회용 식판

을 쓴다. 2020년 시립병원 전제로 2021년 민간병원으로 확대한다.

병물 아리수는 내년부터 재난·구호용(연 50만병 내외)으로만 생산·공급한다. 행사장에서는 이동식 음수대, 대형물통 등을 설치해 병물 아리수 사용량을 대폭 줄인다.

시민단체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5대 1회용품(컵·빨대·비닐봉투·배달용품·세탁비닐) 안 쓰기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여성환경연대는 푸경에 빨대가 돌출된 일체형 컵을 쓰라고 홍보한다. 알맹이가 있는 슬러시 등 음료는 스테인리스 등 다회용 빨대 사용을 실천하도록 홍보한다.

서울세미음부녀회는 비닐봉투를 많이 사용하는 전통시장 4곳(화곡본동·길동시장·장위·종곡제일시장) 상인회와 실무협의를 거쳐 비닐봉투는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늘리는 자율실천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생선, 육류 등 수분이 포함된 제품은 부득이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서울교육청, 학교지을 종합 감사시스템 전면 도입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자율종합감사시스템 전면 도입을 추진한다.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자율운영체제를 향한 교육행정의 재구조화를 위해 예방 중심의 학교지을 종합감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학교자율종합감사는 기존 교육청 주도의 감사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각종 비리를 예방하고 업무를 개선할 목적으로 자체 감사반을 편성하게 된다.

감사 시기와 방법 등을 계획하고 학교 업무 전반을 감사해 시정·개선하는 제도다. 학교장이 감사반을 지명하고 교직원 4~5명이 내부감사관으로 임명돼 자율 감사를 실시한다. 단 처분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결정해 통보하게 된다. 학교가 스스로 시정·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심의회에서 감경한다.

교직원끼리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자율감사에는 달리 학교자율종합감사는 외부전문가와 외부감사관, 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이 함께 실시한다.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

